

기초생활권과 연계한 낙후지역 발전방안

2008.12.10

김 선 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 차

- I. 새 정부의 신지역발전정책
 - II. 기초생활권 개발전략
 - III. 낙후지역 발전방안
-

1. 새 정부의 신지역발전정책

신 지역발전정책의 추진배경

□ 지역간 상생발전

- 지역간 대립구조를 타파하고 공생을 통한 총체적 국가경쟁력 제고
- 수도권 규제완화(비물적 지원)와 지방에 대한 투자의 집중(물적 지원)을 동시 추진

□ 지역의 경쟁력 강화

-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
- 경쟁단위의 광역화를 통한 동북아지역 경쟁력 확보

□ 지방의 자립역량 강화

-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한 내생적 특화발전 유도
 - 발전부진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 실현
-

신 지역발전정책의 추진경과 1

□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 및 전략 발표 ('08. 7. 21)

- 광역경제권 중심의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
-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발표 ('08. 9. 10)

- 7개 광역경제권 권역별 발전비전, 권역별 선도산업
 -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수립 개발
-

신 지역발전정책의 추진경과 2

□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발전구상('08. 12. 8)

- 163개 시·군의 발전(자치구 제외)
- 시군간 협력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지원강화
- 4대 초광역개발권 발전구상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발전방안

□ 신지역발전정책의 본격적 추진('2010년부터)

- 균특법 개정안 국회(지경위) 제출
 -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2009년 상반기)
-

신 지역발전정책의 주요내용

비전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

기본방향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구축

지역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지역발전

지방분권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

지역간 협력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 정책구상 (7. 21)

추진전략및과제

全國도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단위
차별화된 발전

新 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신 성장동력 구축

행 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재정자율성 제고,
지방 계획 개발권 강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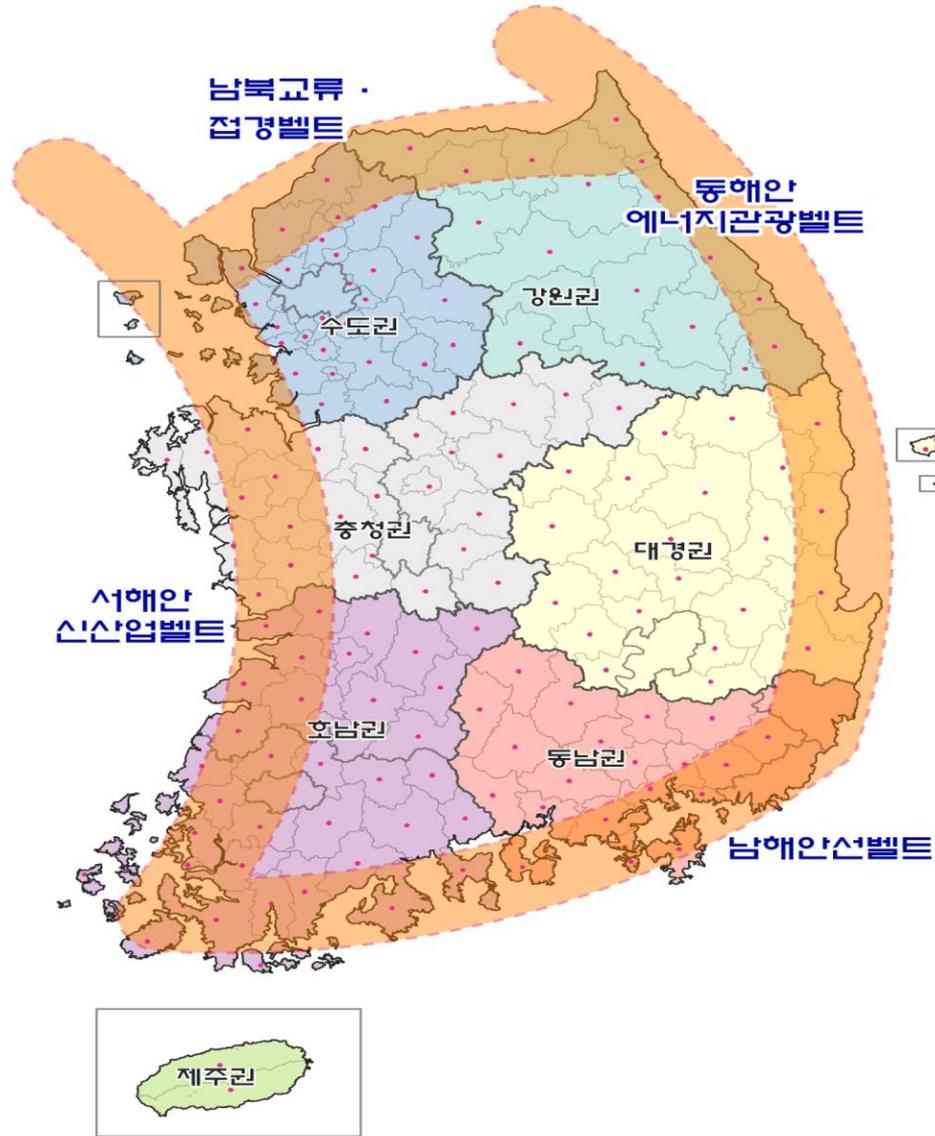
수도권 지방
상생발전

지방 기업유치 및 투자여건 획기적 제고,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수도권규제 합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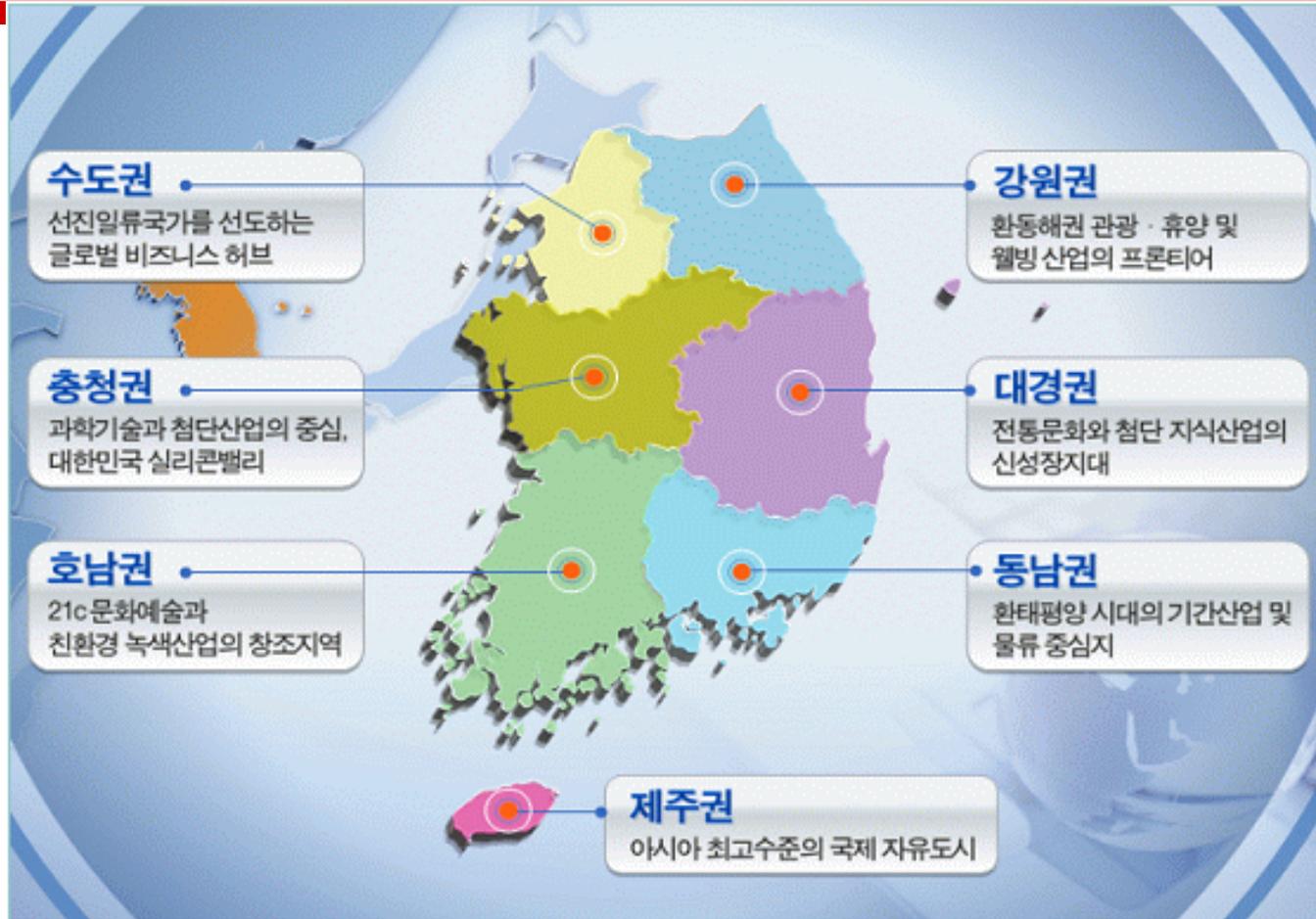
기존 시책 발전 보완

혁신 행정중심도시 기업도시 발전적 보완

□ 기본방향



□ 광역경제권 발전구상 (9. 10)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

	현 행	개정(안)
법 명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역발전특별법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별국가균형발전계획 - 시도지역혁신발전계획 - 시군구지역혁신발전계획(임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5개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별지역발전계획(초광역권구상 포함) - 광역경제권발전계획 - 시도계획, 기초생활권계획(임의계획)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사업(보조) - 지역개발사업(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광역권개발사업(국비 + 민자) - 광역경제권개발사업(보조) - 기초생활권개발사업(보조)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역혁신협의회(기초는 임의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위원회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 지역발전협의회(임의기구)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계정 - 지역혁신계정 - 제주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및지역발전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발전계정(확대) - 지역발전계정(축소) - 제주계정 • 포괄보조방식 도입
낙후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지역 : 오지, 도서, 접경지역, 개축지구 및 신활력지역 • 특별한 지원조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접경, 도서 등)으로 구분 •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II. 기초생활권 개발전략

기초생활권의 추진배경

- **광역경제권 중심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시·군의 지역개발 추진**
 - 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 사업은 글로벌 시각에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 **대도시권 중심의 도시화 추진으로 기초생활권이 지역개발 축에서 소외**
 - 군지역 및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이 급속도로 진행
 - * 인구('06~'07년) : 전국 0.48%, 郡 지역 △0.53%, 지방 중소도시 △0.76%
 - * 고령화(65세 인구, '07년) : 전국 7.97%, 郡 지역 19.8%, 지방 중소도시 15.4%
-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총체적 생활공간으로서의 기초생활권 재인식 필요**
 - 주민이 느끼는 생활공감형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

기초생활권의 개념과 유형

□ 기초생활권의 개념

-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 살든지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단위
- 기초자치단체인 163개 시·군(자치구 제외)을 대상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군

도시형

대도시와 인접 또는 자족 발전이 가능한 도시지역



도농 연계형

중심도시와 인근 농촌지역 연계발전이 가능한 시·군



농산 어촌형

도시와 멀리 떨어진 순수한 농산어촌의 郡 지역



기초생활권의 문제인식

□ 농산어촌, 지방중소도시의 실정

- “인구감소와 고령화 ↔ 소득기반 취약 ↔ 문화·의료 등 생활여건 부실” 등 총체적 어려움 직면
 - * 67개 군이 초고령사회(20% 초과)에 진입
 - * 군 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은 시 지역의 약 1/6 수준
 - * 종합병원(93.6%), 병상수(89.5%), 의료인력(88%) 등 서비스 도시 집중
 - 지방 중소도시도 주택 노후화와 동시에 문화시설 등이 열악한 실정
 - * 인구 30만 이하 지방 도시는 20년 이상 주택이 전체의 1/4 이상 수준
-

기초생활권의 문제인식

□ 특성 및 연계성이 결여된 무차별적 개발사업 추진

- 시·군 단위별로 유사·중복 사업의 백화점식 개발
 - 규모의 경제, 연계 및 특성화 등 개발시너지 효과가 낮음
 - 시·군별 분리 개발로 생활권 개념에 따른 도농통합적 연계 개발 곤란
- 도로 등 H/W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교육·의료·문화 등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 미흡
 -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농산어촌 증가
- 지자체 주도의 지역개발과 괴리된 중앙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 제약
 - 전체 시·군 예산의 10%에 불과한 지역개발 보조금이 각 부처별 200여개 사업으로 소액 분산지원

기초생활권 개발 추진전략

비전

전국 어느 사군에 살든지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

4대
추진
전략

① 특성화·차별화된 개발

- 도시형
- 도농연계형
- 농산어촌형

② 삶의 질/소득 제고

- 교육·문화
- 보건복지·환경
- 1차 산업 고부가가치화

③ 차등적인 생활기반 확충

- 농산어촌/도시
- 성장촉진지역
- 특수상황지역

④ 연계·협력 활성화

- 시·군간 공동사업
- 공동계획 수립·추진
- 시설 복합화

제도
기반
구축

지자체 자율
계획 수립

포괄보조금
전면 도입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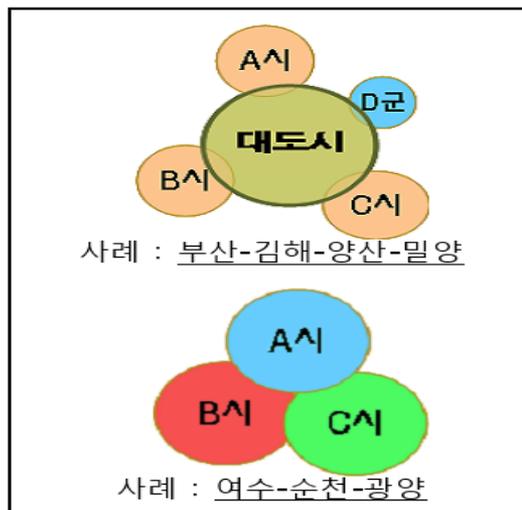
4대 중점 추진전략

□ 전략 1 :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화·차별화된 개발

■ 도시형

- 광역도시권 개발과 구시가지 정비
- 교외도시화에 따른 주거 및 생산 활동의 확산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도시 개발
- 지역산업육성, 전통시장 현대화 등을 통해 도심지역 활력 증진

【공간구조】



【여건 및 특징】

- 대도시가 중심도시로 기능하거나, 자족적 생활권 형성이 가능
 - 인구의 계속적 증가, 고령화 수준이 낮음
 - 소득과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
 - 문화·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이 양호
- * 구도심의 쇠퇴, 일부 도시지역의 주거환경 악화가 문제로 대두

4대 중점 추진전략

■ 도농연계형

-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도농통합적 개발
- 중심도시의 지역경제 및 생활서비스의 거점 기능 강화
- 인접 군 지역의 중심도시 서비스(의료 등) 접근성 향상
- 농공단지 등을 활용, 농촌산업활성화 및 농산어촌 거점 개발

【공간구조】



사례 : 춘천-홍천-양구-화천

【여건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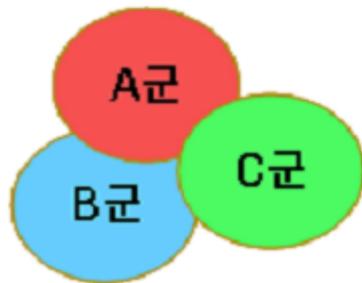
-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소득과 일자리 부족 등 **기본적 생활 여건이 미흡**
- 도농 간의 연계 개발이 활성화 되지 않아 **도농 간의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 여건 격차가 심화**

4대 중점 추진전략

■ 농산어촌형

- 인접 군 지역간 통합적 연계 개발
- 농촌산업활성화 등을 통해 소득 및 고용기회 다각화
- 생활기반시설의 공동개발로 규모의 경제화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연계화
- 중심 읍·면 육성 및 읍·면간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공간구조】



사례 : 영양·봉화·청송, 무주·진안·장수

【여건 및 특징】

- 중심도시가 없거나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전형적인 농촌
-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자족적 생활권 형성 곤란
-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

4대 중점 추진전략

□ 전략 2 : 살고 싶은 정주공간의 형성과 삶의 질 향상

교육, 의료, 문화 등 S/W 중심개발

지역 교육여건 개선으로 지방교육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숙형 공립고 지정, 육성방과후 학교, 원어민 영어교육기회 확대
선진형 의료, 복지 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공보건의료 강화응급,방문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지역복지 서비스 확충
생활문화, 체육,관광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문예시설 생활권별 맞춤형 지원지역별 핵심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환경자원 창조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하수도 보급 확대

기본 삶의 질 향상

4대 중점 추진전략

□ 전략 2 : 살고 싶은 정주공간의 형성과 삶의 질 향상

지역 특화 산업 육성

향토기업, 인재육성 R&D기반 강화	• 향토기업 지원, 인재양성, 미니창업센터 등 지원체계 강화
지역 브랜드의 전략적 마케팅 강화	• 다양한 직거래 네트워크 개척 • 시,군 공동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파워 제고
동어촌산업단지 경제거점으로 육성	• 기술, 경영 공동 지원 프로그램 구축
체험,휴양 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 체험, 휴양 인프라 조성 • 서비스평가제, 규제완화 등 제도 지원

일자리 창출

4대 중점 추진전략

□ 전략 3 : 낙후 및 소외 지역 등의 차등적 생활기반 확충 강화

- 정주·주거 기반을 확충하여 전국 어디든지 최소한의 생활수준 (National Minimum) 보장
 - (농산어촌) 마을단위 기초생활 인프라를 완비와 중심 읍·면 활성화 등 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
 - (중소도시) 노후화된 주거환경의 정비 및 도심 재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기초생활권 중심으로 개발
-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으로, 특수한 여건으로 어려운 지역은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차등적 지원
 - 낙후도 상위 30% 수준인 시·군(50개)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기반시설 확충 및 국고보조율 상향 등 혜택 부여
 -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동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 (접경지역 등)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 대책 강구

4대 중점 추진전략

□ 전략 4 : 시·군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화

- 사업 분야별로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으로 개발시너지 효과 극대화
 - (문화관광 분야) 지역축제 등 지역 문화관광 사업 연계·협력 추진 및 활성화
 - * 공주·부여간 역사문화도시 공동 추진, 백제문화제 공동 개최
 - * 지리산권 7개 시·군이 조합 설립('08), 지리산권 공동 연계사업 추진
- (농산어촌 산업 분야) 농산어촌간 공동 마케팅 등 강화
 - * 보성·하동 등이 주축, 20여개 시·군이 광역 차산업 프로젝트 추진
- (환경 등 비선호시설 분야) 시·군간 협력을 통해 시설의 공동 설치 및 이용 추진
 - * 파주시와 김포시의 소각장과 매립장 공동 설치
 - * 구로구와 광명시간 생활쓰레기 및 생활하수 상호 교환 처리
- 지역협력 촉진을 위해 기초생활권계획의 공동 수립을 추진하고, 협력 모범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시·군간 자율 협의를 바탕으로 역사성,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 기초생활권 계획을 공동 수립하도록 지원
 - 평가를 통해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제도적 기반 구축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자율적 수립사업

- 기초생활권 개발의 계획적·체계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함
 - 시장·군수 또는 2 이상의 시장·군수가 자율 수립, 중앙정부는 계획수립 매뉴얼 등 컨설팅 제공
- 계획은 산업, 문화, 교육, 정주인프라, 복지 등 기초생활권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계획으로 유도
 - 지자체 자율 판단하에 기존 관련계획을 통합 수립
 - * 대상사업은 지자체 자체사업 및 균특회계 보조사업을 포괄하되, 필요시 해당 교육청의 초·중·등교육 관련사업도 연계

제도적 기반 구축

□ 포괄보조금 제도의 전면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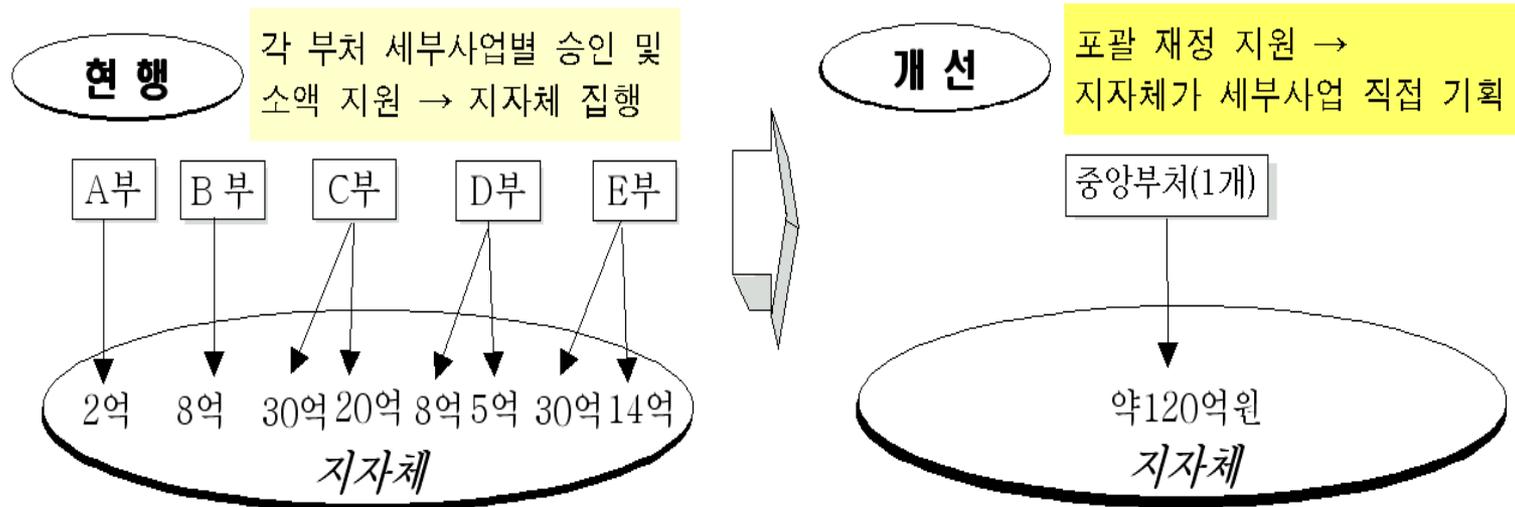
- 지자체가 계획에 따라 직접 예산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
 - 현행 200여개 관련사업을 7개 정책군 21개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통합·단순화 (총 약 3.2조원)

[기초생활권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사업을 포괄하는 종합 발전계획 수립]							
7개 정책군 포괄보조사업 (균특회계)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세/교부금)
문화관광체육	농림수산업	산업중기	보건복지	환경	수자원교통	기초생활기반확충	일반행정, 문화환경, 사회복지, 경제개발

제도적 기반 구축

□ 포괄보조금 제도의 전면 도입

- 중앙부처 위주가 아닌 지역이 사업을 직접 설계하도록 패키지형 지원



제도적 기반 구축

□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체계 강화

- “사전자율, 사후책임” 원칙에 따라 지자체는 재원한도 범위내에서 세부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중앙은 엄정한 사후 평가 실시
 - 중앙부처는 21개 포괄보조금별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하고 사후 추진실적 평가
- 지자체의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재원한도의 일부(10% 내외)를 차등 반영
 -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재원 배분 확대 : ('08) 500억 → ('10) 3,000억 이상

III. 낙후지역 발전방안

현행 낙후지역정책의 문제점

□ 낙후지역개념의 혼재

- 각종 개별법에서 다양한 개념의 낙후지역을 규정
- 낙후지역과 농산어촌 개념이 혼용되고 관련 사업이 중복

□ 유사사업의 중복·분산 투자 및 연계 부족

- 다수 부처가 유사사업을 분산 투자하고 있어 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집행의 혼선 초래
- 소관부처별로 자치단체의 서로 다른 부서가 관리하면서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

□ 중앙주도의 하향식 사업 추진

- 부처별 일률적 지침에 따라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특화발전을 저해
- 중앙부처의 중복투자로 인하여 시군단위에서 종합성 결여

□ 사업평가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미흡

- 낙후지역사업에 대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평가가 미흡
- 평가를 통한 지자체의 책임성과 동기유발이 부족한 채 단순 경비보조로 인식

낙후지역의 개념 및 유형분류

□ 낙후지역의 개념

■ Leo Klaassen의 개념적 논의

- 낙후지역(distressed area) : 한 시점에서 경제적인 몇 가지 측면이 타 지역, 특히 국가 전체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있는 지역
- 낙후지역은 상대적, 가변적, 경제적 개념

■ 낙후지역의 정의 : 지역발전이 부진하여 자력으로 재생이 어려운 지역

- 지역발전 부진 : 잠재력이 취약하여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저하
- 자력재생 곤란 : 인적, 물적 역량 및 재정력 등 자생역량이 취약

■ 낙후성의 구조 : 입지불리 → 발전잠재력 부족 → 발전수준 저하 → 인구유출 및 재정악화 → 자립역량 부족 → 발전심화의 누적적 과정

낙후지역의 개념 및 유형분류

□ 낙후지역의 유형분류

- 낙후지역을 ①일반낙후지역과 ②특수낙후지역으로 이원화
 - 균특법 개정안에서는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

구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목적	낙후지역 자립 성장	특수지역 발전 촉진
지역범위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지역
선정기준	지역 낙후도 (인구, 재정, 소득 부진지역)	지역 특수여건 (접경, 도서 등)

※ 일본 : 일반낙후지역인 과소(過疎)지역과 특수지역인 豪雪지대, 離島, 半島, 中山間(中山間)지역 등을 정책적으로 구분 관리

※ 특수낙후지역은 낙후의 원인이 되는 특수상황에 맞추어 정책선택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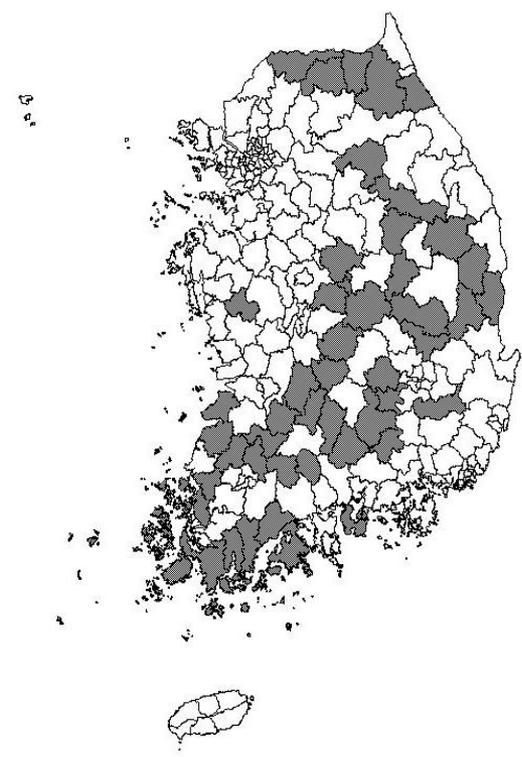
낙후지역의 선정

- **성장촉진지역 : 낙후도를 측정하는 별도의 측정기준에 따라 선정**
 - 낙후지역의 개념에 기초하여 대표성이 검증된 소수지표를 적용
 - 인구증감율, 소득수준(시군 GRDP), 지방재정력지수 등 사용
 - 5년마다 재지정하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

※ 시도별로 관할 시군 단위에 대한 GRDP 추계가 완료되면 활용이 가능
- **특수상황지역 : 입지조건이 열악하거나 국가의 특정목적으로 인해 발전에 제한을 받는 지역**
 - 접경지역, 도서지역(폐광지역, 미군기지 이전지역 등)
 -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균형위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

낙후지역 선정결과(예시)

: 50개 성장촉진지역 선정의 경우

소수 지표안	(1안) 인구, 소득, 재정 4개 지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7)	<p>(1안 예시)</p> 
	(2안) 인구, 소득, 재정, 기반시설 6개 지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6)	
다수 지표안	(3안) 인구, 소득, 재정 10개 지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10)	
	(4안) 인구, 소득, 재정, 복지, 기반시설 14개 지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7)	

낙후지역 계획체계

□ 낙후지역 계획체계는 낙후지역정책의 관리시스템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

- ① 낙후지역정책을 균특법체계(법 개정안의 □ □)에서 관리
 - ② 낙후지역정책을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통합관리체계로 관리
- ※ 낙후지역특별법이 국회 발의

□ 균특법체계에서 낙후지역발전계획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수립

- 전체 시군 중 낙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이 낙후지역발전계획
- 기초생활권계획과 마찬가지로 낙후지역발전계획도 법적으로 임의계획의 성격

□ 선정된 낙후지역의 시장·군수가 낙후지역발전계획으로서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수립

- 낙후지역발전계획의 수립을 인센티브 제공과 연계하여 계획수립을 유도
- ※ 특별회계의 차등지원과 「기초생활기반확충」 정책군사업의 지원은 계획수립 지역에만 적용
- 계획이 상호 연관된 경우 20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계획 수립
- 수립한 낙후지역발전계획은 시·군지역발전협의회에서 심의

낙후지역 계획내용

□ 낙후지역발전계획의 구성 및 체계는 기초생활권계획과 연계, 일관성 유지

- 낙후지역발전계획은 기초생활권의 7대 정책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수립
- 대상사업은 균특회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교부금 사업을 포함
- 정책군별로 포괄적 목표를 설정한 다음, 목표달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선정,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제시

□ 특수낙후지역은 유사·연계 지역끼리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테마형 광역사업을 추진

- 인접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차등적 재정인센티브를 부여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연계하여 테마형 사업 지원

낙후지역의 녹색성장사업 추진

□ 추진배경

- 새정부의 '녹색성장(green growth)전략에 따라 녹색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잠재력 발굴
- 여건과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광역적 테마형 특화개발을 추진

□ 추진방향

- 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한 자율기획 및 신청
- 관계부처 및 지역발전위원회의 협력에 의한 추진

□ 추진시책(예시)

- ① 녹색자원을 활용한 「신녹색성장벨트사업(Green Zone)」 추진
 - 유사한 향토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시군간 특산품 공동개발 및 브랜드화사업 추진
 - ※ 예시 : 장수벨트화사업(지리산권 7개 시군), 녹차클러스터(보선·하동 일대), 한방약초클러스터(제천, 장흥, 산청, 문경 등 11개 시군) 등
- ②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농촌지역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를 통해 자립형 바이오에너지 마을을 조성
 - 2020년까지 녹색마을을 600개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40~50%로 제고

낙후지역정책의 추진체계

□ 통합 - 분권형 추진체계 구축

- 관련 부처간 「공동추진단」을 구성,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컨설팅 수행
- 초광역권 및 광역경제권과 낙후지역개발과의 연계·조정을 위하여 시도 권한을 강화
- 사업 추진은 포괄보조 하에서 시군이 자율 집행
- 낙후지역의 역량부족을 극복하고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하여 가급적 시군간 협력사업으로 추진

□ 평가체계 및 기능 강화

- 낙후지역정책의 추진과정에 경쟁시스템을 도입, 효율성과 책임성을 유도
- 총괄부처가 정책군별 주관 부처와 협조하여 대상지역을 실질적 평가
 - 시도 자체평가와 메타평가로 이원화
 - 평가결과에 따라 포괄보조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익년도 지원예산의 조정에 반영

감사합니다